

##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 필요

박 경 철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책임연구원  
kcpark@cni.re.kr

본 연구의 목적은 참여정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국가균형발전의 현황과 한계를 살펴보고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도농 불균형발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을 제시하는 데 있음

### CONTENTS

1. 연구 개요
2. 국가균형발전과 기본소득 논의
3.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 분석
4.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방안
5. 결론

### 요 약

- 참여정부는 국토 불균형발전을 해소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와 10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
- 역대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 발전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특히 농촌지역은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현황과 한계를 살펴보고 도농 간 불균형 발전의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제시하고 그 실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방안을 제시함
- 첫째,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리 개발이 필요함. 기존의 국가균형 발전정책은 오히려 농어촌 인구 감소를 촉진했다는 지적이 필요함
- 둘째,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대상 지역의 명확화가 필요가 있음. 농어촌 지역 전체 실시가 힘든 경우 우선 지역 설정이 필요함
- 셋째,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의 명확화가 필요함. 농어촌 주민 전제로 할 것인지 또는 일부 주민을 우선 지급할 것인지 범위 설정이 필요함
- 넷째, 농민수당 등 유사제와의 관계 설정이 필요함. 현재 농민수당, 농민 기본소득, 공익직불제가 실시되고 있어 이들과의 관계설정이 필요함
- 다섯째, 농어촌 기본소득제 실행을 위한 조직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 제도는 범부처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주관할 것을 제안함
- 마지막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제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함

# 01

## 연구 개요

### 1. 연구 배경

- 참여정부 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만성적인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함
-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립, 세종특별자치시,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함
-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추진 중에 있음.
  - 교통 등 인프라시설 확충
  - 주요 사업 예타 면제
  - 도시 재생, 생활SOC사업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젊은 청년들은 계속 도시로 몰리고 있음.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농촌의 입장에서 보면 불균형발전을 더욱 심화시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대안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가 필요함

## 2. 연구 목적

- 첫째, 도농 불균형 발전 관점에서 국가 균형발전의 성과와 한계 분석
- 둘째, 농어촌 기본소득제의 개념 및 도입의 필요성 논의
- 셋째,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절차적 방법론 검토
- 넷째, 충남도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실행 방안 제시

## 3. 연구 방법

- 문헌조사
- 설문조사: 전체 337명(농촌주민 180명, 도시민 167명)
  - 주요 내용: 도농 격차에 대한 인식 정도,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의견 등
- 인터뷰조사: 지역개발, 기본소득 전문가 11명
  - 주요 내용: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도농 격차에 관한 의견, 농민기본소득과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의견 등

## 1. 국가균형발전정책 현황

- 성경룡(2005)은 지난 반세기 동안 강력한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요소투입형 성장 전략과 수도권 일극 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을 추진한 결과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침체, 국민분열 및 지역갈등, 국토이용의 효율성 저하로 성장의 한계 직면
  - 이러한 배경에 세종특별자치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이 건설
- 하지만 양광식(2018)의 연구에 따르면, 국토기본법에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균형, 경쟁력, 친환경을 중요한 핵심가치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 지역단위에서 경제 성장, 사회적 형평성, 환경질의 균형발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의 균형발전을 산업적 경쟁력 향상을 통한 도시 발전 위주로 정책으로 실시해 왔기 때문
-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다시 힘을 얻고 있음
-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3대 전략, 9대 핵심 과제를 추진 중에 있음

[그림 1]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비전, 목표,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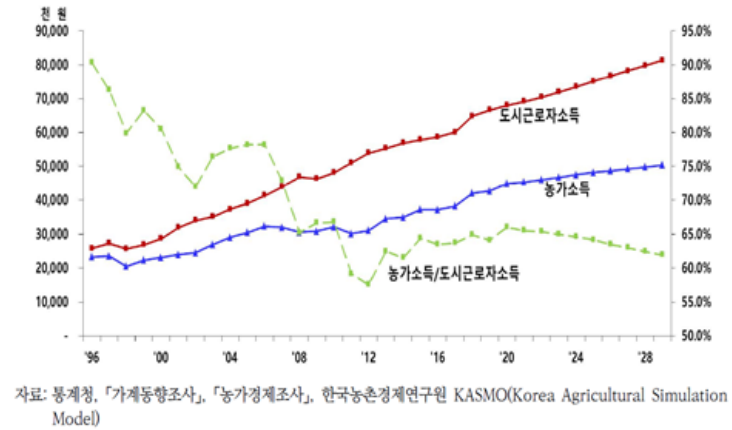
비전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
목표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3대 전략 / 9대 핵심 과제	<div>1. [사람]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div> <div>①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div> <div>②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div> <div>③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div> <div>2. [공간]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div> <div>①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div> <div>②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div> <div>③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div> <div>3. [산업]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div> <div>① 혁신도시 시즌2</div> <div>② 지역산업 3대 혁신</div> <div>③ 지역 유희자산의 경제적 자산화</div>
실행력 제고 방안	<div>【 법령 】 헌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특별법 개정</div> <div>【 조직 】 균형발전 상생회의 신설, 지역혁신체계 구축</div> <div>【 예산 】 ①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div> <div>② 계획계약(포괄지원협약)제도 본격 추진</div> <div>③ 균형발전총괄지표 개발 및 지역차등지원</div>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2. 도농불균형 발전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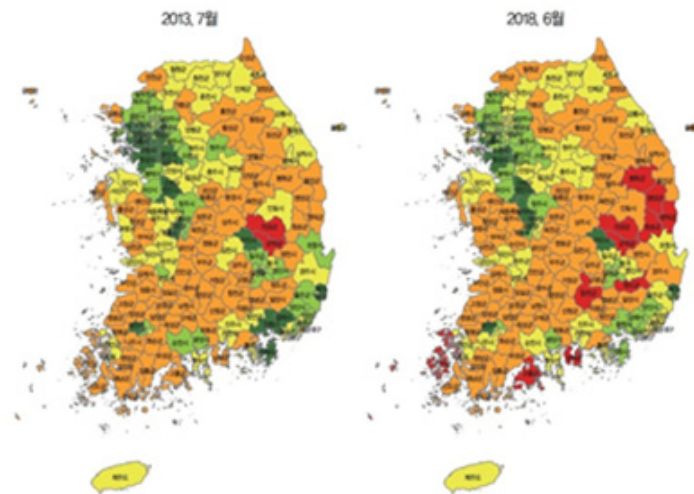
-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 농촌지역 인구 감소가 심화됨에 따라 현재 ‘인구 소멸’, ‘지역 소멸’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

[그림 2] 도농 간 소득 격차 전망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2020

[그림 3] 전국 시군 지방소멸위험지역 변화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8. 지방소멸지수

### 3. 기본소득 논의와 동향

- 기본소득(basic income)의 개념

-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재산이나 소득, 노동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급되는 소득임
-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노동과 연계된 임금체계를 극복해 모든 인간에게 존엄과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념으로 크게 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 등 3가지 특성을 지님(강남훈, 2014)
- 기본소득은 학자들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취지는 인간의 기본권으로써 소득 유무, 직업 여부와 상관없이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 기본소득(basic income)의 등장 배경

- 가이 스탠딩(Guy Standing, 2017)은 기본소득은 현재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지탱할 수 없는 불평등과 불의를 낳는다는 인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말함
- 구체적으로, 20세기 소득분배 체제는 '신자유주의' 경제가 지구 전역을 휩쓸고 기술혁명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 깨졌고 그 결과 나타난 한 가지 현상이 '프레카리아트(precariat)'의 성장임
- 따라서 노동과 소득에 상관없이 노동자의 안정적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과 같은 소득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4. 농민기본소득 논의와 도입 현황

-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의 개념

- 모든 농민에게 영농규모, 영농형태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지급되는 소득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약 252조원, 농진청2012)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사회적 보장

-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의 도입 현황

- 2019년 해남군이 처음으로 지급한 이후 타 자치단체로 급속도로 확산되어 2019년 기준, 전남, 전북, 충남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시작함

[표 1] 전국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 지급 예정 현황

구분	명칭	지급액	대상	예산액	시행시기
경기	농민기본소득	농민 1명당 월5만원	농민 9만1천여명 (6만3천여 농가)	275억	2020년 하반기 경기도내 참여 희망 6개 시군 우선 시행
경기	농촌기본소득	농민 1명당 연간 50만원	1개면 시범지정 (농민 3천~5천명)	105억	2020년 하반기 시범 시행
충남	농어민수당	농가당 월5만원	16만5천여 농가	990억	2020년 시행
충북	(농민수당)	(농가당 월 10만원)	(7만여 농가)		농민수당 조례안 주민발의
전북	농민공익수당	농가당 연간 60만원	10만2천여 농가	613억	2020년 시행
전남	농어민수당	농가당 월 5만원	24만3천여 농가	1459억	2020년 시행
강원	(농민수당)	(농가당 월 5만원)	(6천여 농가)		2020년 시행 계획 수립중
경북 청송	농민수당	농가당 연간 50만원	6천여 농가	30억	2020년 시행
경북 봉화	농업인경영 안정자금	농가당 연간 50만원	6600여 농가	33억	2019년 시행
경남	(농민수당)	(농민 1명당 월 20만원 이내)	(5만여 농가)		농민수당 조례안 주민발의
제주	(농민수당)	(농가당 월 10만원)	(3만7천여 농가)		주민 발의 조례안 준비중

전국 시도 집계 \*(안)은 준비 또는 계획 중

자료 : 한겨레(2020.1.3.)

## 03

##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 분석

### 1.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 설문조사
  - 조사 대상: 충남도민 337명
  - 조사 기간: 2019년 7월 15일~8월 15일(1개월)
  - 조사 내용: 1)도농격차에 대한 인식, 2)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의견 등
  - 조사 방법: 전문 리서치업체 조사 의뢰(일대일 면접 조사)
- 전문가 의견조사
  - 조사 대상: 농업, 농촌, 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11명
  - 조사 기간: 2019년 7월 15일~9월 30일(1.5개월)
  - 조사 내용: 1)도농격차에 대한 인식, 2)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의견 등

### 2. 설문조사 결과

- 세종특별자치시와 혁신도시 건설의 도농 격차 해소 정도를 보면, 농촌주민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포함)는 응답이 44.3%로 많았고, 도시주민은 ‘그렇다’(‘아주 그렇다’ 포함)는 응답이 57.7%로 많아 상반됨

[표 2] 세종특별자치시와 혁신도시 건설의 도농 격차 해소 정도

구 분			항 목					전체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어느 정도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거주지 유형	농촌	빈도	7	75	79	23	1	185
		%	3.8%	40.5%	42.7%	12.4%	0.5%	100.0%
	도시	빈도	5	15	40	75	7	142
		%	3.5%	10.6%	28.2%	52.8%	4.9%	100.0%
전체		빈도	12	90	119	98	8	327
		%	3.7%	27.5%	36.4%	30.0%	2.4%	100.0%

- 지역별 도시와 농어촌 간 발전 격차 인식 정도를 보면, 농촌주민은 ‘심한 편이다’(‘매우 심한 편이다’ 포함)는 응답이 95.7%로 많았고, 도시주민은 45.7%로 상대적으로 적었음

[표 3] 지역별 도시와 농어촌 간 발전 격차 인식 정도

구 분			항 목				전체
			①매우 심한 편이다	②심한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심하지 않다	
거주지 유형	농촌	빈도	52	125	8	0	185
		%	28.1%	67.6%	4.3%	0.0%	100.0%
	도시	빈도	7	58	61	16	142
		%	4.9%	40.8%	43.0%	11.3%	100.0%
전체		빈도	59	183	69	16	327
		%	18.0%	56.0%	21.1%	4.9%	100.0%

- 도시와 농어촌 간 발전 격차 부문을 보면, 농촌주민은 ‘소득·일자리’라는 응답이 38.9%로 가장 많았고, 도시주민은 ‘교육·문화’라는 응답이 57.2%로 가장 많았음

[표 4] 도시와 농어촌 간 발전 격차 부문

구 분			항 목						전체
			①교통	②의료·복지 서비스	③교육·문화	④행정 서비스	⑤생활환경 (주거환경, 상업시설)	⑥소득· 일자리	
거주지 유형	농촌	빈도	10	32	29	10	32	72	185
		%	5.4%	17.3%	15.7%	5.4%	17.3%	38.9%	100.0%
	도시	빈도	9	26	44	7	41	15	142
		%	6.3%	18.3%	31.0%	4.9%	28.9%	10.6%	100.0%
전체		빈도	19	58	73	17	73	87	327
		%	5.8%	17.7%	22.3%	5.2%	22.3%	26.6%	100.0%

-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 인식 정도를 보면, 농촌주민은 ‘심한 편이다’(‘매우 심한 편이다’ 포함)는 응답이 95.2%로 많았고, 도시주민은 57.2%로 상대적으로 적었음

[표 5]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 부문

구 분			항 목				전체
			①매우 심한 편이다	②심한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심하지 않다	
거주지 유형	농촌	빈도	63	113	9	0	185
		%	34.1%	61.1%	4.9%	0.0%	100.0%
	도시	빈도	2	65	64	11	142
		%	1.4%	45.8%	45.1%	7.7%	100.0%
전체		빈도	65	178	73	11	327
		%	19.9%	54.4%	22.3%	3.4%	100.0%

-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여부를 보면, 농촌주민은 ‘찬성한다’(‘매우 찬성한다’ 포함)는 응답이 85.4%로 나타났고, 도시주민은 25.3%로 상대적으로 적었음

[표 6]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여부

구 분			항 목					전체
			①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②찬성하지 않는다	③보통이다	④찬성한다	⑤매우 찬성한다	
거주지 유형	농촌	빈도	0	11	16	98	60	185
		%	0.0%	5.9%	8.6%	53.0%	32.4%	100.0%
	도시	빈도	10	80	16	31	5	142
		%	7.0%	56.3%	11.3%	21.8%	3.5%	100.0%
전체		빈도	10	91	32	129	65	327
		%	3.1%	27.8%	9.8%	39.4%	19.9%	100.0%

- 농어촌 기본소득의 액수 정도를 보면, 농촌주민은 ‘1인당 연간 50~100만원’이라는 응답이 50.3%로 가장 많았고, 도시주민은 ‘1인당 연간 30~50만원’이라는 응답이 43.0%로 가장 많았음

[표 7] 농어촌 기본소득의 액수 정도

구 분			항 목				전체
			①1인당 연간 30만원 미만	②1인당 연간 30~50만원 미만	③1인당 연간 50~100만원 미만	④1인당 연간 100만원 이상	
거주지 유형	농촌	빈도	9	58	93	25	185
		%	4.9%	31.4%	50.3%	13.5%	100.0%
	도시	빈도	40	61	34	7	142
		%	28.2%	43.0%	23.9%	4.9%	100.0%
전체		빈도	49	119	127	32	327
		%	15.0%	36.4%	38.8%	9.8%	100.0%

### 3.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농어촌 기본소득은 도농 간 불균형 완화에 도움이 될 것임

“농어촌 주민수당 도입에 찬성한다. 그 이유는 농촌지역의 소멸 애기가 나올 정도로 도농 간 소득 격차와 농어촌 지역의 불균형발전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농어촌 주민수당이 도입될 경우 도농 간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다.(서울 농업〇〇위원회 이〇〇 위원 인터뷰조사 내용)

- 농민수당을 농촌주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도시은퇴자들의 농촌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함

“농어촌 주민수당 도입에 적극 찬성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고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더 지급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업인 외 농촌주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상품권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고령 농업인과 소농을 보호하고 도시지역 은퇴자들의 유입을 위한 중요한 수단일 것이다.”(충남 ○○대학교 지역개발 전공 김○○ 교수 인터뷰조사 내용)

- 전체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표 8] 농어촌 주민수당(기본소득)의 지급 대상, 액수, 방식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전문가	지급액 및 방식	특징
서울 이○○ 연구원	지급 대상: 지역 내 거주자 지급액: 작은 액수라도 시작, 이후 차츰 증액 지급 방식: 개인별, 월별 지급, 미성년자는 성인보호자에 지급	거주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정하고 미성년자 까지 지급
충남 김○○ 교수	지급 대상: 농업인 우선 대상 지급액: 중앙정부 월 30만 원, 지방정부 20만 원 지급 방식: 개인별	공공근로 등 자원 통합, 지자체 세율 제고, 농지보전부담금과 같은 농지관리기금 적극 활용
서울 송○○ 위원	지급 대상: 실거주자 전체 지급액: 농어촌에 살고 싶은 유인이 될 정도 수준 지급 방식: 개인별	국민기본소득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
서울 이○○ 연구원	지급 대상: 면, 마을 거주자 대상 시범사업 실시 지급액: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월 50만 원 정도) 지급 방식: 개인별	마을, 면이 살아야 지역이 살 수 있음. 지역경제와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강구
서울 이○○ 위원	지급 대상: 소멸예상지역 거주자 대상 시범 실시 지급액: 농민수당을 점차 농어촌 주민수당으로 전환 지급 방식: 개인별	농어촌 지역, 연령 설정이 필요하고 공익형 직불금은 인적직불로, 농민수당은 농어촌 주민수당으로 전환
충남 박○○ 교수	지급 대상: 지역 내 농가 지급액: 농가당 연간 최소 500만 원 지급 방식: 농가	각종 복지프로그램과 통합, 낭비성 사업 정리. 독일은 농가당 직불금이 1,000만 원 이상임
서울 금○○ 소장	지급 대상: 지역 내 거주민 지급액: 조세 방식에 따라 다름 지급 방식: 개인별	공공방식의 자연재생에너지 발전, ‘농어촌 생태환경 기여기금’과 같은 방식으로 재정 마련
서울 김○○ 부소장	지급 대상: 지역 내 거주민 지급액: 월 50만원, 개인별 25만 원 지급 방식: 가구별	기초생활수급의 생계급여 절반 수준 지급. 당장 실현이 어려우면 월 10만 원부터 실시
충북 윤○○ 교수	지급 대상: 지역 내 농가 지급액: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만한 수준 지급 방식: 개인별/가구별	농어촌 주민수당은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조 성격을 가져야 하며 사회적 공감대 확보 필요
서울 신○○ 국장	지급 대상: 지역 내 농가 지급액: 농가별 월 50만원, 개인별 20~30만 원 지급 방식: 개인별/가구별	지역화폐 지급을 우선으로 하고 사용권 확보를 위해 일정 비율은 현금 지급도 고려 필요
충남 김○○ 교수	지급 대상: 실제 농어민, 농어업 및 농어민 관련 공공 서비스 공급자 지급액: 최소임금의 1/3 수준 지급 방식: 현금 및 지역화폐, 부부 각각 해당금액의 1/2로 나누어 지급	부채지주 철저히 제외 농촌환경 및 경관 개선, 마을 공동체 활동, 사회적 농업 종사자 포함. 부부는 별도로 지급

## 04

#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방안

-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은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처럼 대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농 간 불균형 완화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한 만큼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리개발
  - 사실 농어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많은 부문에서 낙후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반감이나 회의를 갖는 사람들이 많음
  - 농어촌 기본소득 논리개발은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행에 있어서 도시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데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것임
- 둘째,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대상 지역 명확화
  -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이 제도가 실시된다면 전국 농어촌지역 가운데 어떤 지역을 우선 도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합의 필요
  - 우선적으로는 인구감소가 심하고 낙후된 지역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급 대상 명확화
  -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시한다면 그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이 제도를 실시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농어촌 주민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할 것임
- 넷째,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등 유사제도와 관계 설정
  -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 및 증진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삶의 유지를 위해 농민수당제를 도입하고 있음
  -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이 제도와 관계 설정이 필요함
- 다섯째, 농어촌 기본소득제 실행을 위한 조직체계 구축
  - 농어촌 기본소득은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실행하기 위한 주체와 자원 확보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함
  - 농어촌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범부처의 합의체가 필요함
- 여섯째, 농어촌 기본소득제 실행을 위한 자원 마련
  - 일반적으로 기본소득은 범위와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함
  - 기존 예산 범위 내 수용이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예산마련을 위한 방안도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토보유세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함

## 05 결 론

- 이상과 같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방안까지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함.
- 따라서 이러한 논의와 분석, 그리고 도입 방안 등을 종합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함

[표 9]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

개선 방안	세부 내용	착안점
1.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리 개발	① 도시와 기반 건설 위주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 제시 ② 지역경쟁력 강화 차원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 제시 ③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오히려 농어촌지역 주민감소 촉진 ④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써 농어촌 기본소득제 제시	생태환경보전 논리 보완 필요
2.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대상 지역 명확화	① 인구감소 심각지역: 지역소멸위기지역, 한계지역(마을) 등 ② 환경보호지역: 친수지역, 친환경농업지역 등 ③ 특수지역: 발전소주변지역, 환경오염피해지역 등	전체 지역이 어려울 경우 특정 지역 우선 실시
3.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 명확화	① 지급 범위: 전체 주민 또는 일부 주민 ② 지급 제외자 고려사항: 신분(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수익, 거주기간, 연령, 지급 단위(개별 또는 가구별) 등 ③ 지급 방식: 현금, 지역화폐, 전자화폐 등	농민수당(농민 기본소득)제 참고
4. 농민수당 등 유사제도와의 관계 설정	①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과 무관하게 지급 ②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수급자 제외 또는 차등 지원	농민수당(농민 기본소득)제 사각지대 해소
5. 농어촌 기본소득제 실행을 위한 조직체계 구축	① 국무총리실: 범부처 총괄 운영 ②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 정책 담당 ③ 행정자치부: 행정과 인구정책 담당 ④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어촌정책 담당 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범부처 국가균형발전 정책 자문 ⑥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범부처 농어업·농어촌정책 자문 ⑦ 광역 및 기초지자체(충남도 및 각 사군): 지자체 자체적인 (시범)사업 추진	정치권의 의지 중요
6. 농어촌 기본소득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	① 중앙정부 재정 활용 ② 지자체 자체 예산	중앙정부+지방 정부 예산 매칭 가능

박 경 철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책임연구원  
041-840-1206, kcpark@cni.re.kr

※ 본 글은 충남연구원 2019년 전략과제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 연구”를  
현 시점에 맞게 요약, 보완한 것임.

- 가이 스탠딩. 안효상 옮김.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 파주: 창비.
- 강남훈. 2014a. “모두에게 존엄과 자유를: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기본소득’”, 『계간 민주』 10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36-157.
- 강남훈. 2014b. “미국의 기본소득보장의 사상과 운동”. 강남훈, 곽노완 등. 기본소득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전망. 서울: 박종철출판사.
- 강남훈. 2019. 기본소득의 경제학. 고양: 박종철출판사.
- 김성훈. “농가에 기본소득을!”. 프레시안 2015년 1월 8일자 보도.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2018.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 박경철. 2013. “충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정책 제언”. 충남발전연구원 『정책포커스』 제38호: 1-7.
- 박경철. 2015. 충남형 농촌주민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 박경철·강마야·한승석. 충남 농민기본소득보장제 도입방안 연구. 충남도의회.
- 성경룡. 2005. “균형발전이 미래이다”. 『열린충남』 (가을호), 2-3.
- 이원재 등. 2019. 국민기본소득제: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 제안. 서울: LAB2050.
- 임준홍. 2013. “새정부의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제안”, 『열린충남』 봄호, 7-11.
- 정기석. 2018.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서울: 삶창
- 최광운. 2010.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21세기 지구를 뒤흔들 희망 프로젝트. 서울: 박종철출판사.
- 필리프 판 파레이스·야니크 판데르보흐트. 홍기빈 옮김. 21세기 기본소득. 서울: 흐름 출판.
- 하승수. 2015.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대구: 도서출판 한티재.
- 황윤·이계삼 외. 2015. 숨통이 트인다. 옥천: 포도밭출판사.
- John Marangos, Thomas Paine (1737-1809) and Thomas Spence (1750-1814) on Basic Income Guarantee, <http://www.usbig.net/>
- Guy Standing. Unconditional Basic Income: Two pilots in Madhya Pradesh. A Background Note prepared for the Delhi Conference, May 30-31, 2013.